

“금리인하 시기상조...3.5% 전망 변동 가능”

이창용 “내년 상반기 경기 어려워...경기 침체 경계선” 물가 중점 통화정책 이어가지만...경기·금융안정 고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0일 “기준금리 3.5%는 전제가 바뀌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물가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가 데이터 변화에 따라 일부 수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이날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회견에서 “기준금리 3.5%를 예상한 것은 11월 금통위 당시 금통위원들의 의견으로 소통의 차원이지만 약속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은이 그렇게 간단하지, 정책에 대한 약속으로 이해하면 곤란하다”며 “11월 경제 데이터만 볼 때는 다수 금통위원들이 3.5%면

과소나 과잉 대응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경제 상황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은의 기준금리는 3.25%로 이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에서 금통위원 대다수가 내년 최종 기준금리를 3.5%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 총재는 또 최근 장단기 금리 역전이 경제침체 전조라는 해석에 대해 “경기침체를 예측하는 것은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면서도 경기 침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내년 상반기에는 경기가 많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 경제성장률을 1.7%로 전망했는데, 경기침체로 가느냐, 아니냐 하는 경계선에 있다”고

말했다.

한은이 경기침체 경계선에 서 있다고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데 물가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한은의 통화정책 기조가 일부 수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그러나 모두발언에서 “물가에 중점을 둔 통화정책 운영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며 현재의 긴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이 과정에서 금융안정을 고려하겠다고 말해 속도도절을 시사했다.

그는 “내년중 물가상승률이 상고하저의 흐름을 나타내면서 점차 낮아지더라도 물가목표 2%를 웃도는 높은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물가에 중점을 둔 통화정책 운영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 과정에서 물가 오름세 둔화 속도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데이터를 통해 그간의 정책이 국내경기 둔화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등 주요국 정책금리 변화도 함께 고려하면서 정교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금리상승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조정과 이에 따른 금융안정 저하 가능성, 우리 경제 각 부문에 미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 등에 대해서도 각별히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리인하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금리 인하 논의는 시기상조”라며 당분간 금리인하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를 하려면 물가가 중장기적으로 목표치에 수렴한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게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 대다수 의견”이라고 말했다. /뉴스

“서울시, 현대산업개발 강력 처벌해야” 조오섭 의원 “비공개 2차 청문회 ‘뺑주기’ 요식행위 우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이 20일 “서울시가 오는 22일 개최하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2차 청문회가 ‘현대산업개발(현산) 뺑주기’ 요식행위로 흘러선 안 된다”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2차 청문회 개요와 일정, 장소, 위원 명단 등 세부내용을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조 의원은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등 복잡한 정치·사회적 분위기를 틈 타 소소소문 없이 비공개 2차 청문회를 진행 중”이라며 “무고한 노동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것도 모자라 입주 예정자들과 인근 상인들까지 큰 피해를 입힌 현산에 엄중하고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토부가 서울시에 건설사고 조사위원회 보고서를 함께 엄중처분 요청 공문을 보내고 고용노동부가 안전보건조치 위반사실 확인 내

용을 담은 영업지 요청 공문을 보낸 시점이 3월 말”이라며 “사고가 발생한 지 11개월, 국토부와 고용노동부 공문이 받은 지 9개월이 지나도록 행정처분을 미뤄온 것은 서울시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발표된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 현산의 부실시공 등이 증명한 만큼 서울시의 2차 청문회가 현산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청문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국토부, 고용노동부 등의 권고와 경찰의 수사결과를 무시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면 국민적 공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도기 기자



이재명 “尹정부 의한 인권 후퇴가 일상...적극 나서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인권위원회를 향해 “최근 윤석열 정부에 의한 인권 후퇴가 일상화되고 있다”며 “인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 나서 개선, 침해 방지, 구제 활동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20일 민주당 인권위원회에서 “당 정체성을 보여주는 인권위가 출범하게 됐다”며 “우리가 인권이 너무나 당연해 공기처럼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시기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공기가 희박해지면 귀한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최근 윤석열 정부에 의한 인권 후퇴가 일상화되다 보니 또 다시 인권의 중요성이 매우 심각하게 대두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는 “만평을 그렸다는 이유로 학생이 탄압받거나, 있는 사실을 보도했다고 보도한 기자와 언론사를 압박하거나, 말을 했다가 압수수색 당하지 않을까·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가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진출에 실패했다고 말하면서 “대한민국 인권 상황이 어떤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고도 했다.



‘인권위원회 출범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권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순호 경찰국장 6개월만 치안정감 ‘고속 승진’ 조지호·김순호 2명...‘경찰 서열 2위’ 치안정감에

김순호 행정안전부 초대 경찰국장 조지호 경찰청 공공안전정보국장이 경찰 서열 두 번째 계급인 치안정감으로 승진했다.

경찰청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경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치안정감은 경찰 정점인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으로 국가수사본부장과 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개 자리가 해당한다.

김 국장과 조 국장은 지난 6월 나란히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승진했는데, 6개월 만에 다시 나란히 치안정감으로 올라섰다.

광주 출신인 김 국장은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경장 경력경쟁채용으로 입직했다.

서울 방배경찰서 생활안전과장, 경찰청 감찰담당관,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부장, 수원남부경찰서장, 경찰청 안보수사국 등을 거쳐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설치된 경찰국 초대 국장을 맡았다.

경찰국장 발탁 이후에는 군사정권 당시 ‘프락치’ 활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그는 과거 인천·부천노회민주노동자회(인노회) 활동을 했고, 그가 자취를 감춘 이후 경찰의 전방위적 수사가 진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김 국장이 동료들을 밀고한 뒤 경찰에 채용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경북 청송 출신인 조 국장은 경찰대(6기) 출신으로, 윤희근 경찰청장경 장 경력경쟁채용으로 입직했다.

興 ‘전대 당원투표 100%’ 결선투표 당헌 개정안 의결

국민의힘은 20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차기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방식으로 일반 국민 여론조사 없이 ‘당원 투표 100%’와 결선투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 본관에서 제9차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당원투표 100% 확대를 비롯해 결선투표제, 여론조사 시 역선택 방지조항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 작성 및 발의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헌 개정(안) 작성 및 발의의 건은 재적 55명, 참여 39명, 찬성 35명, 반대 4명으로 가결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앞서 전날 전체회의에서 당원 투표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인 현행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을 일반 국민 여론조사 없이 당원 투표 100%로 확대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당원들의 총의를 확인하고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결선투표제, 각종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자와 지지정당이 없는 이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역선택 방지조항’ 의무 규정을 마련했다.

美 F-22 전투기·B-52H 전략폭격기 전개...한미연합훈련

F-35A 등 한미훈련 참가...F-22 4년만에 한국출동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꼽히는 미국의 F-22 랩터가 4년 만에 한반도로 전개했다.

또 미국의 전략폭격기 B-52H도 한반도 인근으로 전개해 한미 연합훈련을 진행했다.

국방부는 한미 양국 공군이 20일 미국 전략폭격기(B-52H)의 한반도 인근 전개를 계기로 한미 연합공군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미측 F-22전투기와 우리측 F-35·F-15K 전투기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제주도 서남방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일대에서 시행됐다.

특히 일본 가미나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미 공군의 F-22 전투기는 이날 군산기지에 전개해 이번 주 국내에

머무르며 우리 공군의 F-35A와 연합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합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될 방침이다.

미 공군의 F-22 랩터 전투기는 최초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이자, 지상 최강의 전투기로 꼽힌다.

F-22는 전체 레이더 반사 면적이 0.0001㎡에 불과해 곤충의 크기보다도 작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 속도는 마하 2.5음속의 25배 이상을 낼 수 있을 만큼 빠르다.

또 작전반경도 2177km에 달하며, 1000파운드(453.6kg)의 폭탄 2발도 장착할 수 있다. 지난 2006년 F-15 등 4세대 전투기와 별인 모의 공중전에서 14대 0이라는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

이번 미국의 전략폭격기(B-52H) 및 F-22 전투기의 전개는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합의한 미국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의 일환이다. 당시 한미 국방장관은 “미국 전략자산은 적시적이고 조율되게, 빈도와 강도를 증가해 운용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국방부는 “한미 군사당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루어진 이번 연합공군훈련은 미국의 확장억제 자산인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 상황에서 한미 최선에 전투기들이 전략자산 엄호절차를 숙달하는 내용이었다”며 “한미간의 상호운용성 향상 및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는 미국의 확장억제를 포함한 동맹의 능력과 태세를 지속 강화함으로써,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확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 서구 공직자 해외연수비 과다 편성 논란 8억 규모 국제화여비 편성...김액 없이 최종확정

광주 서구가 내년도 공무원 국외 연수를 위해 편성한 예산 8억 원이 어렵사리 의회 문턱을 넘었다. 선심성으로 볼 만한 예산인 데도 예비비까지 끌어와 과다 편성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광주 서구의회는 20일 제30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제화여비 편성 등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국제화여비는 공무원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해외의 시찰 또는 견학에 쓰이는 비용이다.

내년도 서구 국제화여비 편성 규모는 8억 원이다.

구체적으로 ▲해외선진지 견학 5

억(문화예술과·체육관광과·기후환경과·복지정책과·주민자치과) ▲집중 관리 예산 2억 원(기획실) ▲6급 중견간부 리더 과정 국외 연수 5400만 원(행정지원과) ▲국외 출장 수행 2600만 원(의회사무국) ▲해외 선진지 시찰 2000만 원(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등이다.

이러한 예산안을 놓고 의회 심의 과정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지난 16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심의에서 윤정민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구체적인 국외 연수 계획·일정 등이 빠져’다, ‘자칫 유류증 연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도기 기자

興, 성탄절·석탄일 대체 공휴일 제안... “정부도 긍정”

주호영 “내수 진작·휴식권 확대 등 고려해야”

국민의힘은 20일 정부에 크리스마스 및 석가탄신일 대체 공휴일 대상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휴일 규정에 따르면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이 주말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수 진작,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 정부가 대체

공휴일 지정 확대를 고민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는 일요일(25일)은 크리스마스다. 일요일이 아니라면 하루 쉬 수 있는 공휴일인데 아쉽게도 올해는 그렇지 않다”며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은 국경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공휴일 대상에서 빠진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휴일은 한해 15일이지만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겹치느냐에 따라 변동이 있는데, 내년

에는 모두 휴일과 겹쳐서 평년보다 이를 줄여 13일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대체공휴일 제도를 도입하고 난 뒤 효과를 보니 유등이나 여행, 외식업체 등 내수 진작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며 “국민들이 즐기는 휴식도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전했다. 그는 “내수 진작,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를 검토할 때가 됐다”며 “내년부터는 국경일이 아닌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

호매민평 이태원